

이슈브리프 885호
(2026. 8.19)

다카이치 총리 취임 1년과 한일관계: ‘Two-Track’ 전략의 지속성과 과제

제885호

주동진 joo2868@inss.re.kr



국문초록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간이 이제 곧 1년을 채운다. 더불어 한일관계도 양국이 견지해 온 'Two-track' 전략 기조 아래 셔틀외교 행보를 반복하며 외교·안보적 소통·공조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혀왔다. 다만 최근의 일본 국내 정치 동향을 둘러싼 긴장과 우경화 행보가 고조되며 한일관계 역시 다시 이전의 냉각 국면으로 전환될지를 우려하는 시선들 또한 점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일갈등 장기화 △기록적인 엔저와 재정의 양적 완화 강행 △우경화에 기반한 여러 법적 개정 시도 등으로 인해 연일 현안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일본 집권 세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대가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일본 집권 세력의 정치적 기반 불안정은 △우경화 심화가속 △주변국의 우려·경계 자극 △외교적 소통·공조의 공회전 △여론의 정치적 불신·냉소주의 확산 △셔틀외교 추동력 약화 △한일관계 정체 국면 등을 연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선제적 문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한일관계 셔틀외교 속 굴곡·파고에 따른 긴장을 전망하고 양국 간 'Two-track' 전략의 지속성을 진단하며 셔틀외교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키워드: 한일관계, 'Two-Track' 전략, 셔틀외교, 우경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인한 한일 간 긴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양국 간 ‘Two-Track’ 전략에 싹트는 균열과 갈등의 발화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Two-Track’ 전략은 양국 간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 현안’ 과 소통·공조가 필요한 ‘긴급 현안’ 을 서로 구별·분리함으로써 양자관계의 건재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중요한 점은 해당 전략이 ‘민감 현안’ 배제를 추구하지 않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실용적으로 조율하는 ‘운영의 묘’ 에 방점을 찍는다는 점이다. 즉, ‘Two-Track’ 전략은 ‘민감 현안’ · ‘긴급 현안’ 간 균형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견지되어야만 실효적일 수 있다. 일본이 현 해빙 국면을 중시하며 서틀외교와 ‘Two-Track’ 전략에 충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정치권의 지속되는 혼조 국면

다카이치 총리의 불통·독주 행보가 일본 여론·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견제·저항과 정치적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현 정치권은 △내각 중심의 폐쇄적·일방적 구조 △총리 중심의 인사편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형태로 고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결정권이 여타 세력·의도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속내를 시사하는 부분으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일본 집권 세력은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정당정치·중일갈등 관련 내우외환을 초래·감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중·러의 ‘전후(戰後) 시대착오적·군국주의적 행보’ 라는 비판 속에서도 총리의 △ ‘강한 일본’ △ ‘책임있는 적극재정’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미중일·한중일·제1도련선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연루(entrapment)의 딜레마’ 를 발생시키며 주변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일본이

△ ‘보통국가·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 △엔저(円低)에 따른 통화위기에
여파 등에 대한 동맹·우방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앞으로도 전략적 소통·
공조의 한 축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일관적인 ‘Two-Track’ 전략 견지 노력

일본은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 2026’에서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다시 반복하며 우리나라를 4년째 4순위(호주→유럽→인도→한국) 협력국
으로 평가했다. 즉, 일본의 항구적 0순위인 미국의 존재를 고려하면 실질적
으로는 5순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존중·견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입장유사국’이자 ‘가치공유국’으로 평가하며 ‘한미일 안보
3각 공조 견지’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중시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성·실효성 병행 노력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를 초월해 지
정학적·역사적 관점에서 견지되고 있다. 국가 정상뿐만 아니라 고위급
사이의 빈번한 회동은 분명히 비용과 시간 등 국력을 소모하는 작업이다.
이에 여론과 국익의 차원에서 투자 대비 성과물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확인 작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면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중일갈등 장기화와 각자도생 기조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위한 기능적·효율적 측면에서 일견 불가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일본의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에 불과하다.
국가는 신뢰를 배경으로 타국과의 양보·타협이 중장기적 국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결단과 추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국의 이익만
추진·확보할 수 있는 양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관성적인 ‘Two-Track’ 전략과 ‘경색’ 국면의 부상 가능성

일본 정부 기조의 기저에 깔린 편향성·일방성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결국 정책의 성과를 점증적으로 잠식·훼손한다. 더불어 지향성을 상실한 관성적 행보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한일관계는 급박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여러 경쟁적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거래주의적 동맹관에 입각한 영향권 재편과 서반구 전략이 유관국들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한일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경제안보·기술안보 관련 경쟁적 현안들이 각자도생의 국익 우선주의적 측면에서 △반도체·메모리 △해운·조선 △희토류 △방산 시장 △원유·원자력·LNG △ODA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표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한일 양국 간 △경제협회 △경제인회의 △의원연맹 등 활발한 민간외교·의원외교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합의의 도출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사 현안 관련 극적 변화가 부재한 가운데 ‘Two-Track’ 전략의 두 축 중 하나인 ‘긴급 현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본이 추진 중인 △역내 도서 거점화 전략 △정보·감시 역량 강화 △자위대 해외 진출 △군사력 증강 △3대 안보 문서와 ‘비핵 3원칙’ 개정 △헌법 9조 개헌 등의 ‘강한 일본’ 행보는 ‘저조한 소통·공조 관련 결과물에 대한 회의’ 속에서 장차 양국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집권 세력의 지지를 하락세 속 우경화 정책은 잔존 중인 ‘민감 현안’과 수시로 직결되는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사 외면 행보는 그 휘발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즉, 한일관계 정체 국면이 이대로 방치되면 양국 간 여론적 공감대·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저해하는 정치적 딜레마·난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정치적 난맥은 양자관계 속 우려를 가시화·고착화하는데 그 무엇보다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경색’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하다.

‘한일관계 2027’ 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필요성

‘한일관계 결빙 재발’ 가능성 관련 우려가 ‘서틀외교 속 산적한 미해결 과제들’ 의 모습을 빌려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견지를 위한 ‘강한 일본’ 관련 우경화 기조나 포퓰리즘적 전략 행보는 한일관계의 호혜성·회복탄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설정과 ‘민감 현안’ 외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국을 둘러싼 회의론적 관점·평가가 ‘2027년에도 서틀외교가 수행될 가능성과 그 실효성’ 에 대한 의구심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와의 직면과 자성을 통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동향·행보는 총리와 자민당의 기조가 지속되는 이상 향후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파생시킬 것이다. 현재 일본은 △중일갈등 장기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 △순조로운 한중관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공조·연대 필요성’ 인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은 ‘상호 간에 불편했던 과거로의 회귀’ 관련 우려가 실체화되어가는 추이 속에서도 과거사 극복 없는 ‘Two-Track’ 전략이 동북아 외교·안보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며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관계·구도가 결국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향후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지금의 행보를 견지할 경우이다. 한일 서틀외교 관련 추진 동력의 확보가 저조한 가운데 일본 정치권의 초점이 ‘정국 내 여야 간 줄다리기’에만 집중될 경우,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여러 ‘급랭 유발’ 요인이 발생하거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한일관계 속 단기적 부침과 난항에 구애받지 않을 ‘대(對)일본 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타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일관계 셔틀외교의 ‘지향성 설정’ 과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속 과거 미화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유네스코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사도광산 추도식 공회전 △군함도 문제 △조세이탄광 DNA 검사 표류 등의 과거사 외면 행보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Two-Track’ 전략의 실효성은 양보·인정 없이 균형이 무너진 채로 피상적인 소통·공조만 반복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적 국익만 고수·추동할수록 빠르게 저하된다. 더불어 국가의 기회 비용 관련 전략적·효율적 사용이 국익과 직결되는 가운데 강대국 간 갈등과 ‘Tit-for-Tat’에 따른 악순환 또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일 모두 셔틀외교 속 양면성·유연성의 마지노선을 직시·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견지·견인하는 행보는 지정학적·전략적 측면에서 분명히 실용적 선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셔틀외교의 지속성은 대가 없이 담보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일 간 양자 관계와 실용외교를 병존시키기 위한 상호호혜적인 전략적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일 양국이 미중갈등과 중견국 연대전략의 측면에서 여러 난맥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함께 구축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